

광주시 불통 행정에 시민 '부글부글'

출생축하금 폐지·육아수당 축소...시청에 항의 전화·맘카페 비난 글

광주시에 출생축하금 폐지(광주일보 2022년 12월 28일자 6면) 결정에 지역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육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사전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홍보 부족, 어설픈 해명 등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했다. 출생축하금은 광주시가 2021년 입법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다.

생후 2년까지 월 20만원, 총 480만원이었던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총 240만원)만 유지하고 내년에는 폐지한다.

광주시는 정부 사업과 중복하는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생후 0~11개월 월 7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등 부모 급여도 신설했다.

하지만 광주시 자체 지원이 폐지됐다는 소식에 시 여성가족과와 비서실 등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맘카페 등에도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새해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중순에서야 폐지를 결정하고, 시민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홍보 절차도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새해 들어 오히려 자체 출산 지원을 늘리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점도 광주 거주 임산부들을 열 받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결국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출생축하금 예산 등으로) 손자녀 돌봄, 입원 아동 돌봄 등 각종 돌봄 사

업 확대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김 국장은 다만 시민소통 부족 등과 관련해서 "바뀐 시책을 바로 설명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국장은 또 추가 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정부 사업과 중복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주시의 어설픈 해명은 시민 여론을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 A씨는 이날 한 맘카페 게시판에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타 시도에는 없는 전국 최초·최대라며 적극 홍보하더니 이제는 다른 지역도 지원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는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다"며 "똑같은 내용(행정)을 놓고 그때 그때 말이 바뀌는 행정조직을 어떤 시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제2순환로 방음터널 점검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분야, 터널분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3일 오후 제2순환도로 광주 동구 윤림동 구간에 설치된 방음터널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DJ 센터 사장 폭언 '직장내 괴롭힘' 인정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김상목 사장에 인권교육 등 권고

김상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폭언 등 '갑질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일부 행위 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은 이런 내용의 결정문을 최근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의 인격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업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옴부즈맨은 김 사장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피해자 1명에 대한 유급휴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권고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정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감사위는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나 행정 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피해 직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옴부즈맨의 판단을 바탕으로 노동청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조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고 폭언 등 갑질 행위 피해를 호소했다. 김 사장은 업무 개선,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남도음식 쿡박스' 독일서 열풍

9개 시·군 음식+관광지 스토리텔링...온라인 배송업체 매출 급증

전남 농수산식품과 관광지를 연계해 출시한 '남도음식 쿡박스'를 독일 관광공사가 대량 구매하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유럽사무소와 베를린 소재 이지룩아시아가 공동으로 제작한 제1호 '남도음식 쿡박스'는 전남지역 특산물로 만든 대표 농수산식품과 각 지역의 관광지를 독일 현지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독일어 가이드북을 담아 제작했다.

최근 한국 음악과 영화 등의 인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현지인에게 음식의 기원, 조리법과 함께 관광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전남 식품 수출 확대는 물론 관광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음식 쿡박스'는 해조류와 한과, 나물비빔밥, 유자주스, 녹차, 배, 천일염 등 농수산식품과 여수, 나주, 담양, 구례, 고흥, 보성, 장성, 완도, 신안 등 9개 시·군 대표 관광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엮었다. 고객이 남도음식을 맛보며 전남의 관광지를 간접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

전남 쿡박스 판매를 맡고 있는 이지룩아시아는 쿡박스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배송하는 베를린의 푸드 트레블 스타트업기업이다. 유럽에서 1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이 매년 30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민철 이지룩아시아 대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케이 푸드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도음식 쿡박스'를 개발했다"며 "독일인이 집에서 전남의 음식과 차를 맛보고, 여수 밤바다와 장성 백양사 등 전남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는 꿈을 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국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유럽사무소에서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작한 '남도음식 쿡박스' 사업은 전남의 오픈프린팅 상설 판매장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 해외 사무소와 상설 판매장이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모든 지역에 '남도음식 쿡박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순 10·19 희생자 신고율 높이기 총력

5029건 신고·접수...전남도, 홍보 강화·기간 연장 노력

전남도가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신고 기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기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 신고·접수 현황은 진상규명 신고 167건, 희생자·유족 등 4862건 등 총 5029건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앙부처, 대통령실 등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공적 자료 등 특정할 수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의 역추적 통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은 기간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율 제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해 올 한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신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전남도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원에서 4만원, 관리기는 1만5000원에서 7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실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86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임대사업소 6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 5개소에 50억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